

데스크시각



임 동 옥
서울취재본부장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총성 없는 유치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전공대 입지 발표 이후 짙막하게 환영 입장을 내고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한전공대 조기 건립과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에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 지사도 “전남도와 광주시는 원래 한 뿌리였고 경제적 공동체였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광주시와 상생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가 한전공대 유치전을 끝내고 앞다퉂 ‘상생’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략적으로 한전공대

한전공대 광주·전남 상생의 에너지로

입지를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라면 지사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한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미래를 위한 상생 발전의 동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도 합의 결정했더라면

한전공대의 유치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나주 등 지자체의 부담이 많게는 1000억 원대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부영에 전남도가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나주에 한전 등을 주축으로 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선 것은 민선 4기인 지난 2005년 박광대 광주시장의 통 큰 리더십이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전공대 유치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양보 없는 경쟁은 아쉬움이 크다.

한전공대가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남아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특별법이나 특별법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내 대학 정원이 남아돈다는 점과 한전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들며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난제들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풀기 어렵다. 광주·전남의 역량이 결집돼야만 가능하다. 당장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결집해야 한다. 여당이 끌고 야당이 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공조는 필수다.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어 광주·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과 제2 혁신도시 등 광주·전남 상생 현안을 풀어가는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말로만 상생을 주장하기보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한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광주·전남 상생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지역 민심을 결집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에타 면제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광주·무안공항 통합 현안도 조속히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전공대를 품어 안은 김영록 전남 지사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의 ‘허송 세월’ 없어야

광주·전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다. 정치는 이미 변방으로 밀렸고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민선 1기 시도지사는 도청 이전과 사·도 통합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두 수장의 성을 탄 ‘허송 세월’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허송세월’은 엄중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허용될 수 없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시장이 이제 기존의 관료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두 사람이 상생 현안에 대한 실제적 공조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과감하게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구조적으로나 상당히 발전된 국가가 되어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부가 역할을 분리해서 가정을 운영했다. 주로 남편의 역할이었지만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를 하고, 주로 부인의 역할이었지만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구조는 최근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높은 교육 수준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 못지 않게 여성들도 사회적인 성취를 추구한다. 그러한 성취는 20대와 30대의 결과에 의해 성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임 기간의 경력 단절을 두려워한다. 기업은 좋은 근로자를 얻기를 원하고 국가는 생산 활동의 증가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구조와 이해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에겐 참으로 역부족이다.

해외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간혹 눈에 띄는 외국인들을 보면 신기하고 두려웠다. 외국어를 말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말쑥이 피해가기가 더반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생들도 길안 내를 하며 자연스럽게 다닌다. TV 화면에는 외국인들이 유창한 우리말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일상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덕분에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신라 시대에 인도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무역을 했으며 예조 스님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를 여행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였다. 반강제적이고 인간味が 부족한 방법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잘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

착해 우리 국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유럽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유럽인들이 비록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자유롭게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결혼하면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시아의 국가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경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유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발전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아시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숙민주의 정책을 완화시켜서 숙주주의를 보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력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인구 절벽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해결 방법을 갖게 될 것이다.



임 명 재
악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더 끔찍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부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의 지역에서 출산을 하면 장려금도 지원해준다. 주 5일 근무나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기 고

슬픈 100세 시대와 커뮤니티 케어



서 대 석
광주 서구청장

나 어릴 적만 해도 노년은 축복이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자식들을 건실하게 키워낸 부모의 얼굴 깊숙이 박힌 주름이야말로 최고의 훈장 아니었겠나? 자식들은 그런 노고에 보답고자 조석으로 부모를 모셨고, 세상살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땐 늘으신 부모님께 삶의 지혜를 여쭙며 난관을 이겨내 왔다.

젊음과 바퀴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돌봤던 부모의 노년을 자식들이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십 년 만에 세대는 바뀌고 말았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변화 등으로 노인들이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하고 호흡하며 살아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슬픈 100세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

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뒷전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나 된다.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3만 8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7년 남짓 남은 셈이다. 10여 년 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100년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비할 시간도 길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시범 사업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본인들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

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가 눈에 띈다. 실제로 지금의 복지 시설과 병원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오래도록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의 절반 이상(57%)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양 시설을 원치 않아도,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노인들까지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원치 않는 곳에서 노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는 머지않아 닥쳐 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

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총괄할 T/F팀을 준비중에 있다. 이 팀에는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 자치와 도시 재생 전문가까지 포함된다.

커뮤니티 케어가 복지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 마을 커뮤니티나 의료 분야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 의료 기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 LH주택공사,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 협회 등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 기관들과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준비들을 보다 선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 서구 지역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낼 각오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간다. 자연의 이치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우리의 노년을 축복으로 만들 건지, 재앙으로 이끌런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언제나가 슬픈 100세 시대에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社 說

에타 면제 사업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에타)를 면제해 주는 사업에 광주의 ‘인공 지능(AI) 기반 과학 기술 창업단지’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각각 선정됐다.

우선 광주시의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4000억 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첨단산업 3지구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까지 인제 양성고 창업 지원, 연구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는 지역 전략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 등에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는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13.4km)와 여수 화태~백야연도교(11.4km)는 내년 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

도는 이를 토대로 목포권과 여수권에 해양 관광 거점을 조성해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대양산단에 들어설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 원)는 수산물 가공 시설과 냉동·냉장창고, 국제수산물거래소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번 에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호남권의 총 사업비 규모는 전북까지 포함해 2조 5000억 원에 불과, 영남권의 9조 2000억 원, 충청권의 7조 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된 것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가 절실한 광주·전남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쉬움이 남지만 에타 면제로 지역 속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치밀한 후속 계획과 예산 적기 확보로 이들 사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애용을

설은 다가오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인기가 시들하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광주 지역 가맹점은 30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전통시장에 가 보면 상당수 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거절하곤 한다. 실제 광주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최소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업소와 받지 않는 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도 없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인들의 눈치를 봐 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상인들도 할 말

이 없지 않다. 양동시장의 한 상인은 “사실 손님이 상품권의 액면가 60% 미만을 사용했을 때는 잔돈을 상품권으로 거슬러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환전 받을 때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아 가맹점 미등록 점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점포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는 뻔한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소비자와 상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용처 확대와 구매 금액대별 추가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객들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애용하고, 상인들은 정부와 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전공대의 롤 모델인 포항공대(포스텍)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두 명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과 포스텍 초대 학장을 지낸 김호길 박사다. 박 회장은 ‘교육보국’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작지만 세계적인 공대를 만들기 위해 마음먹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칼텍)를 벤치마킹했다. 연구 중심 대학인 칼텍의 뛰어난 산·학·연 협조 체제를 높이

샷다. 문제는 인재를 구하는 일이었다. 1980년대 중반, 시골이나 마천가지인 포항까지 올 인재는 거의 없었다. 이때 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김호길 박사다. 김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LG그룹이 추진하던 진주 연암공전 설립 인가가 좌절되자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한 사기 공화국’이라고 일갈한 괴짜였다.

박 회장은 ‘10고 초려’ 끝에 김 박사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했다. “포항제철 부설 포항공대가 아니라 포항공대 부설 포항제철이 될 텐데 괜찮겠느냐”며 대학 운영 전권과 함께 1400억 원이나 하는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해 달라는 김 박사의 요구

도 흔쾌히 수용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세계적인 공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의기투합했다. 해외에서 우수 교수진을 초빙했고 대대적인 홍보로 설립 첫해 신입생 모집에서 2.18대 1의 경쟁률을 상위 2% 이내 인재를 끌어모았다. 포스텍은 2017년 더타임즈 선정 소규모 대학 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1위인 칼텍을 바짝 추격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문대 반열에 올랐다.

한전공대 부지가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확정됐다. 부지 선정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거의 없었다. 이때 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김호길 박사다. 김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LG그룹이 추진하던 진주 연암공전 설립 인가가 좌절되자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한 사기 공화국’이라고 일갈한 괴짜였다. 박 회장은 ‘10고 초려’ 끝에 김 박사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했다. “포항제철 부설 포항공대가 아니라 포항공대 부설 포항제철이 될 텐데 괜찮겠느냐”며 대학 운영 전권과 함께 1400억 원이나 하는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해 달라는 김 박사의 요구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 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여 론 매 체 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예 항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